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한달간 9명 사망

1월27일 확대 적용 이후 22일까지 중대재해 9건 적용 유예 불발 후 정부 지원에도 잇단 사망사고 使 "유예 없이는 부작용" vs 勞 "여전히 언급 문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오는 27일 시행 한 달에 맞는 가운데, 이 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10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계는 이미 법이 시행된 만큼 사업장들이 안전에 더욱 신경써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영세 업체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추가 유예를 거듭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이를 둘러싼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된 지난달 27일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는 지난 22일 기준 9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9명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2년 1월27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우선 시행됐으며, 2년 유예를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은 제외)까지 확대 적용됐다.

그간 정부 여당과 경영계는 법의 확대 적용에 앞서 영세 업체들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법 시행 전인 지난달 25일에 이어 시행 후인 이달 1일에도 여야가 이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국회 본회의 상정은 불발,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됐다.

일단 법이 시행된 만큼 고용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추진을 서두르기로 했다.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안

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여력이 부족한 안전보건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사업장들을 위해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주말 동안 주유소, 미용실, 제과점, 음식점, 공사장 등 50인 미만 사업장들을 직접 돌며 사업주들과 만나 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법 시행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페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 중 집게 마스트와 화물 적재함에 끼어 숨졌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첫 중대재해법 적용 사례다.

같은 날 강원도 평창에서는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중국 국적의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5.6m 아래로 추락해 숨지기도 했다. 지난 1일에는 경기도 포천에서 50대 근로자가 2톤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려 사망했다.

이후에도 지난 22일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6건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추가로 발생해 고용 당국이 현재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한 달을 맞은 상황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평가는 엇갈린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지난 22일 주요 기업들이 참여한 '중대재해 예방 정책 간담회'에서 "열악한 경영 여건 속에서 준비가 부족한 많은 중소기업들은 향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없이는 부작용 해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와 법률 개정을 지속 추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통화에서 "법이 이미 시행된 만큼 사업주들은 지금이라도 사업장 안전을 위해 준비와 점검에 더 나서야 한다"며 "그러나 경영계가 여전히 적용 유예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했다.

당장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관심사다.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사실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 법안이 상정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원책만큼이나 중소기업인들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다름 아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라며 "다시 한번 민주당에 요청한다. 부디 민주당의 전형적인 태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일 본회의 상정 불발 이후 여야 간의 미 있는 논의가 없었던 데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 재포결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 만큼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소기업계는 29일 본회의에서 추가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2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은 사고가 사업주 때문이라는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처벌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노동 전문 변호사들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역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최 실장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두 성기업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지 않았느냐"며 "명확성 원칙 등에 모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미 결론이 났는데, 이를 다시 다루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희면기자



광주 남부소방, 노후 아파트 전기화재 안전관리대책 추진

광주 남부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아파트 대상 전기화재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선옥기자



신안소방,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교육 훈련 및 평가

신안소방서는 이번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저감하고자 소방안전대책 소방안전교육 분야 특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교육훈련 및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곡성소방, 겨울철 1급 특정소방대상물 합동소방훈련 실시

곡성소방서는 최근 오후 13시 30분 곡성군 입면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에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 하였다.

곡성=양해영기자



완도소방, 119실버소방관 합동훈련 및 현장활동 실시

완도소방서는 지난 23일 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 소속 119실버소방관들과 합동 훈련 및 현장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완도=송준표기자



담양경찰 수복파출소, 참여치안 간담회 개최

담양경찰서 수복파출소는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관련 수복파출소와 수복면사무소와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담양=박종영기자



고흥 포두파출소, 경찰발전협의회 권역별 간담회 실시

고흥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5시 포두파출소에서 경찰발전협의회 권역별 간담회를 실시했다.

고흥=기동채본부

광주 시립제2요양병원 폐원 1개월...부지 재활용 방안 난항

종사자·사회단체 "공공병원으로 재개원" 요구



광주시가 폐원을 결정한 광주 시립제2요양병원 재활용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 1개월이 지나도록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요양병원 폐원 후 일자리를 잃은 종사자 등은 "공공병원 폐원은 고령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지자체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재개원을 촉구하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폐업한 시립제2요양병원 부지를 재활용 하기 위해 논

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안이 세워지지 않았다.

시립제2요양병원은 광주 남구 덕남동 1만5170㎡ 부지·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5359㎡)·196병상 규모로 지난 2013년 9월 문을 열었다.

전남대병원이 10여년동안 수탁 운영했지만 적자 누적에 이유로 지난해 재계약을 포기했다.

광주시는 새로운 수탁기관을 공모했지만 응모자가 없어 같은해 12월 31일 폐업 신고하고 요양

병원 운영을 공식 종료했다.

코로나19 때는 감염 환자 전담병원으로 활용됐으며 일부 환자는 퇴원·전원 조치했다. 종사자는 의사 5명, 간호사 20명, 간호조무사·행정직 등 62명이 남아있으며 일부는 본원 등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를 잃은 일부 직원들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분부는 "광주시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활용하면서 발생한 적자를 이유로 폐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공공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환자들은 사설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개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폐원이 결정된 부지는 법규상 다시 병원시설로 활용할 수 없어 광주시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립제2요양병원 부지는 도시계획 용도가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돼 있어 운영을 중단하면 다시 병원시설로 개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의료법인 재설립은 1년 6개월 이상 소요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광주지역 요양시설은 62개·1만4438병상으로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병원·병상수 모두 전국 1위 해당하고 병상 가동률도 67%로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과포화 상태이다"며 "같은 사회복지시설인 요양원 전환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 "시립제2요양병원 직원들은 광주일자리 종합센터와 연계·협력해 취업 알선에 나서는 한편 부지 활용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유나기자

"이강인, 손흥민에게 한 '하극상'으로 100억 손실 입어"

"프랑스 1부 리그 홍보 제외...이미지 훼손 증거"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손흥민(32·토트넘)에게 일으킨 '하극상'으로 인해 이강인이 1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지난 21일 베트남 매체 '전짜'는 "이강인이 손흥민과의 싸움으로 이미지가 훼손되면서 무거운 경제적 처벌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강인이 통신, 차권, 취업 광고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면서 연간 25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계산이다.

전짜는 "한국에서 잘 알려진 회사를 비롯해서 다른 기업 관련업체까지 포함하면 손흥민과의 싸움으로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PSG(파리생제르맹) 프랑스 1부 리그 생방송을 알리는 한국 중계권자 포스터에서 이강인이 사라진 것에 대해 "유럽 5대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는 한국인이 국내 홍보에서 제외된 것은 비효율적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나쁜 상황"이라며 "아

시안컵 준결승에서 탈락한 뒤 선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이강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아시안컵 대회에서 저의 짧은 생각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흥민이 형을 비롯한 팀 전체와 축구 팬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라며 사과하는 글을 올렸다. 같은 날 손흥민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강민이가 진심으로 반성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전했다.

뉴시스